



경북일보

대표전화 (054)289-2222 · (053)745-1122

kyongbuk.com



제8840호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정부·의료계, 더 늦기전에 ‘대화의 장’ 열어라”

국립대 총장협 “의대생·교수들 국민 곁 지켜달라” 호소
정부엔 ‘질 높은 의학교육’ 지원 등 출구전략 마련 촉구

국가거점 국립대 총장협의회가 의과대학 학생·교수와 정부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14일 정부의 의대충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에 대한 우려에 공감하고 조속히 학업을 이어갈 것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내놨다.

이번 갈등이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로 번지고 있으며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에게 강의실로 돌아오라고 요청했다. 집단 수업거부는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돼 개인의 학업 성취와 학위 취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미래의 의료 현장에도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전공의 집단시작은 이미 많은 병원에서 심각한 진료 공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료현장의 혼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병원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의료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자자 의사로서 의대 교수들의 현명한 지혜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에 대해 의료개혁의 핵심은 질 높은 의학교육에서 출발해야한다고 조언하며 충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대 정원확대 등을 위해 재정적·환경적 개선은 물론 선진화된 기초·임상 교육 과정의 안정적 운영, 실습 기자재와 교수 인력 확보, 고도화된 임상실습 환경의 구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2025년 예산 편성부터 의과대학 교육 환경 구비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 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도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체적으로도 혁신과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며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도 더 나은 의료체계 개혁을 위해 질책과 외면이 아닌 이해와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대구 미술제 개막 제43회 대구 미술제가 14일 대구 달서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시민들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이 정훈진 기자 jhj131@kyongbuk.com

늘어난 의대 정원 ‘80%’ 비수도권 배정

대통령실 “거점 대학 경쟁력 제고…지역인재전형 비율도 상향 조정”

2000명으로 증원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3면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 개혁 방침에 따라 의대 정원 배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대통령실 출입기자에게 “의료개혁을 위해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에 따라 후속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원한 의대 증원을 수도권에 20%, 비수도권에는 8%

0% 정도로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분 2000명 중 수도권에 400명, 비수도권에 1600명의 정원을 늘리는 셈이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 정원 3

058명 가운데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035명(33.8%),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2023명(66.2%)이다. 정부 구상대로 정원이 배정되면 수도권 정원은 13개교 1435명, 비수도권 정원은 27개교 3623명이 된다.

이 경우 전체 의대 정원(5천58명) 가운데 수도권 비율은 28.4%로 5.4%포인트 축소된다. 반면 비수도권 정원은 71.6%로 그만큼 확대된다. 늘어난 정원을 비수도권에 더욱 많이 배분

하는 것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역 의료 강화 방안’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 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수가’를 도입하고,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옮리는 방안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교육부 주도로 이같이 의료 개혁 작업의 원칙을 정한 뒤 내달 마무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 4월 중·하순 이전에 정원 배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제22대 총선
D - 26



국민의힘 경선 ‘현역 강세’ 지속

부산북을 박성훈 4자 경선 승리

포천·기평 권신일 - 김용태 압축

국민의힘 4·10 총선 후보 경선에서 현역 불패가 이어졌다. 박형수 의원이 본선행을 확정했고, 김영식 의원은 대통령실 출신과 결선을 치르게 됐다.

관련기사 4·5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6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6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경선에

서는 초선 현역 박형수 의원이 김재원

전 의원을 꺾었다.

경북 구미을에서는 초선 현역 김영식 의원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결선을 치르게 됐다. 허성우 전 대통령실 국민제안비서관, 최우영 전 경상북도 경제특별보좌관은 탈락했다.

이날 6개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현역 의원 2명이 각각 본선행과 결선행을 확정 지은 것이다.

4자 경선을 치른 부산 북을에서는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출신의 박성훈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서울시 출신 간 대결로 주목받은 경기 하남을에서는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이 안철수 의원의 최측근인 김도식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꺾고 본선에 올랐다.

5자 경선이 치러진 경기 포천·기평은 권신일 전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과 친이준석계였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결선 치른다. 2면에 계속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영남권 53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영남지역 53개 경제단체가 14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예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결의대회를 연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의 유예를 요구했다.

김명량 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과 박창용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경북·대구 경제 단체 대표들도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이날 허현호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인사말에서 “영남지역은 제조업, 건설업뿐만 아니라 조선업, 어업 등 다양한 업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자영업자들과 어업인도 동참했다.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80여 년간 3대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권재천 김천횟집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조나 건설업이나 해당되고 식당은 당연히 해당 사항조차 없다고 생각해 왔다”면서 “조리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사장에게 묻고 구속한다면 어떻게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31우노호 김태환 선주는 “어선 전복 등 대처할 수 없는 인명 사고 시 선주나 선장을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 어디있나”라며 “어업인들이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법을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영남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자리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안전문건설협회 등 14개 중소기업·건설·수산업 단체가 후원에 나섰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결의대회를 후원한 14개 단체를 대표해 “제조업·건설업뿐만 아니라 수산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21대 국회가 5월 말 까지인데, 유예법안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예천 2024 현대양궁월드컵

2024. 5. 21 [화] - 5. 26 [일] | 6일간

예천진호국제양궁장

HYUNDAI

TURKISH AIRLINES

SPORTOTO

errea

SNGLRTY

주최 |

주관 |

대한양궁협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경상북도 양궁협회

예천군체육회